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6. 25.

행 정 재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남 문

1. 발 의 자: 황선화 의원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추진한 각종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예산집행 공표 대상사업 및 실명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다. 공표 내용 및 방법(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공표시기 및 공표기간(안 제6조 및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협조부서: 재무과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1. 5. 25. ~ 5.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예산사업에 대해 집행 내용과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기술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 공표 대상 사업과 실명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 공표 내용과 방법, 시기 및 기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구의회에서 승인한 각종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 집행내용과 관련자의 실명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아울러 국민의 참여와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관련법규 ＞

붙임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